

'5·18 성폭력' 철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뒤따라야

전남도민일보 時論

38년 전 '광주의 진실'은 아직도 짙은 안개 속이다. 올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소문만 무성했던 계엄군의 성폭력에 관한 진실의 한 가닥이 모습을 드러냈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5·18 관련 성폭력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5·18 때 여성에게 가해진 성폭력과 고문의 실상에 대한 피해자 증언은 올해 초에야 나오기 시작했다. 광주항쟁 당시 가두방송을 했다 성폭행과 고문 등을 당했던 김선옥(60) 씨의 용기에서 비롯됐다.

그녀의 증언은 광주 5·18 자유공원 야외광장에서 지난 5월 개막한 '5·18 영창 특별전-스물세 개의 방 이야기'에 담겼다.

광주사람들은 스물세 살의 꽃다운 나이에 군화발에 짓밟힌 그녀의 삶 속에서

5·18의 상처를 다시 눈물로 보듬어야 했다. 그녀뿐 아니다. 공동조사단 조사에서 한 피해자는 "지금도 열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린다"고 했다. "가족에게도,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다"라거나 "스무 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라고 아픔을 전한 피해자도 있었다고 한다. '오월의 악몽'은 이들에게 아직도 진행형이다.

공동조사단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의 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여고생이 강제로 군용트럭에 실려 가는 모습,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만행을 당한 여성 사체를 목격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위국헌신(爲國獻身)을 본분으로 삼아야 할 군인들이 총부리를 시민에게 겨누는 것도 모자라 연약한 여성들에게 이토록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는 의문마저 들게 한다.

계엄군에 의해 저질러진 5·18 성폭력은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공동조사단이 제안한 국가의 사과·표명·재발 방지 약속, 국가폭력 피해자 자유를 위한 트라

우마센터 건립 등은 당연한 후속 조치다.

더 중요한 것은 5·18 성폭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공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는 성폭력의 일부만 확인된 결과물이다.

책임자와 가해자 조사는 첫발도 떼지 못했다. 공동조사단 활동이 5개월로 짧고 강제조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폭력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범죄다. 철저하게 진상이 밝혀지고 가해자와 책임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공동조사단 활동이 완료됨에 따라 5·18 성폭력 조사는 이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맡게 됐다.

5·18 특별법이 지난 9월 14일부터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위는 아직 출범조차 하지 않았다.

정당의 진상조사위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합심해서 하루라도 빨리 진상조사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38년의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5·18의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데다 실제적 진실은 가뭇없이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다. 미적필 일이 아니다.

社說

통일장관 해임안 충돌, 한반도평화 정쟁화 우려스럽다

자유한국당이 조영균 통일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야당이 발의한 첫 장관 해임건의안이다. 헌법 63조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해임건의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만한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건의가 남용된다면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조 장관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법적 절차인 장관 해임건의라는 '칼'까지 뽑아들어야 하는 사태에 맞닥뜨렸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제1야당인 한국당의 의무라는데 이견을 달 수 없다. 그러나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에 세계적 관심이 쏠려있을 때에 남북 관계 주무부처 장관의 해임 여부를 놓고 정쟁에 휘말리는 것은 소모적이다.

한국당은 해임건의안 제출 사유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강행 ▲국회 예산심의위원회를 침해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비용 97억원 사용 ▲남북고위급 회담의 탈북민 출신 기자 취재 불허 등을 들었다. 남북 철도·도로 공동연락사무소 문제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당의 정치적 비판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탈북민 기자 취재 불허 문제의 경우 조 장관 책임으로 따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조 장관이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유감을 표시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중대한 해임 사유가 될지는 의문이다.

한국당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헌정 질서를 무력화한 장관을 해임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의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끝없는 한국당의 뽀니이고 생떼부리기"라고 반박했다.

해임건의안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여야 정치 공방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해임건의안은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이 시간 안에 표결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조 장관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87년 개헌 이후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경우는 단 3차례뿐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고 정쟁에 휘말리는 것은 소모적이다. 한국당은 해임건의안 제출 사유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강행 ▲국회 예산심의위원회를 침해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비용 97억원 사용 ▲남북고위급 회담의 탈북민 출신 기자 취재 불허 등을 들었다. 남북 철도·도로 공동연락사무소 문제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당의 정치적 비판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탈북민 기자 취재 불허 문제의 경우 조 장관 책임으로 따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조 장관이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유감을 표시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중대한 해임 사유가 될지는 의문이다.

독자 기고

안전한 난방기구 사용법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부는 찬바람에 집 한편에 넣어 두었던 전기장판이나 난로 등 난방기구들을 꺼내야 하는 계절이 된 것이다. 소방청에서 분석한 '2017년 화재발생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발화요인 중 전기적 요인은 부주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21%(9,256건)이고 최초 착화물의 18.4%(8,049건)가 '전기, 전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기적 요인의 화재는 가을·겨울철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화재를 예방하고 추운 계절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한 개씩은 있을 법한 난방기구의 사용 전 안전 확인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난방기구인 전기장판과 난로의 사용 전 확인사항 및 화재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전기장판의 주요 화재원인은 과열

및 과전압, 피복 벗겨짐으로 인한 누전 등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전압 예방을 위해 온도조절기의 고장 유무를 확인한다.

둘째, 특정부분이 접히거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사용 전 피복의 벗겨짐을 확인한다.

셋째,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넷째, 물세탁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난로의 경우에는 첫째, 사용 전 먼지를 제거한다.

둘째, 온도조절기의 고장유무나 피복 벗겨짐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또한 이러한 난방 기구는 하나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사용하면 과부하가 걸려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콘센트는 용량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복사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인화장소가 없는 벽으로부터 20c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 스위치 꺼짐 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작은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부터 화재를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봉성윤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독자 기고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이제 그만

가을이 되고 불꽃축제, 단풍놀이 등 지역마다 특색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다 보니 대형 관광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관광버스는 수십 명의 승객들이 탑승하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히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관광버스의 수요가 많아지는 가

을철에는 장거리를 이동하는 승객들의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 관광버스 내에 노래방 기구를 설치하고 차량 내부를 불법개조하는 등 위법행위가 만연한 현실이다.

관광버스 내에서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고 춤을 추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다

넘어지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버스 내에서 음주를 하는 것이다.

술에 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감각과 방향감각이 떨어져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현재 관광버스 내에서 음주가무행위는 도로교통법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음주가무 행위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40점을 받게 되며, 승객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5만 원을 물게 된다.

관광버스 차주와 운전자, 승객들은 한번 걸러봤자 일정금액의 범칙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만연하며, 경찰의 단속으로는 위법행위에 대한 근절에 한계가 있다.

단속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운전자와 버스회사 관계자의 안전의식에 대한 자발적인 동참이다.

날씨 좋은 가을날 기본적인 도로교통법을 지켜 다양한 행사가 참여하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나태환
광주청 1기동대 순경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124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석빌딩 5층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편집인 전광선 광고 (062)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사장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무대리 제갈대중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마음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읽는 바른신문

전남도민일보
지역기자안내

| 지역 | 직급 | 성명 | 연락처 | 지역 | 직급 | 성명 | 연락처 |
|------|-------|-----|---------------|----|------|-----|---------------|
| 광산구청 | 국장대우 | 고훈석 | 010-9992-8212 | 강진 | 본부장 | 윤규진 | 010-2001-8078 |
| 광산 | 차장 | 고도경 | 010-3699-3804 | 해남 | 본부장 | 윤규진 | 010-2001-8078 |
| 동구 | 국장대우 | 서기만 | 010-4602-0708 | 장성 | 부장 | 정윤성 | 010-3640-6323 |
| 남구 | 부장 | 여명진 | 010-4634-7005 | 무안 | 차장 | 김수형 | 010-3648-0281 |
| 북구 | 부장 | 김정관 | 010-9464-2555 | 영광 | 차장 | 김진 | 010-9221-0000 |
| 목포 | 국장대우 | 박성태 | 010-3602-5869 | 여수 | 본부장 | 오승택 | 010-2080-6002 |
| 신안 | 국장대우 | 박성태 | 010-3602-5869 | 순천 | 본부장 | 오승택 | 010-2080-6002 |
| 나주 | 국장대우 | 김동철 | 010-3604-2611 | 광양 | 본부장 | 오승택 | 010-2080-6002 |
| 담양 | 국장대우 | 김종연 | 010-6297-7599 | 고흥 | 본부장 | 윤규진 | 010-2001-8078 |
| 곡성 | 부국장대우 | 심섭섭 | 010-3608-2634 | 함평 | 본부장 | 윤규진 | 010-2001-8078 |
| 구례 | 국장대우 | 심건식 | 010-4624-0005 | 영암 | 국장대우 | 김희선 | 010-3631-1617 |
| 보성 | 국장대우 | 김용욱 | 010-3602-8103 | 완도 | 국장대우 | 유대성 | 010-5007-5983 |
| 화순 | 차장 | 남호경 | 010-3624-6785 | 진도 | 부장 | 한길준 | 010-8265-8848 |
| 장흥 | 국장대우 | 김정근 | 010-3601-3517 | | | | |